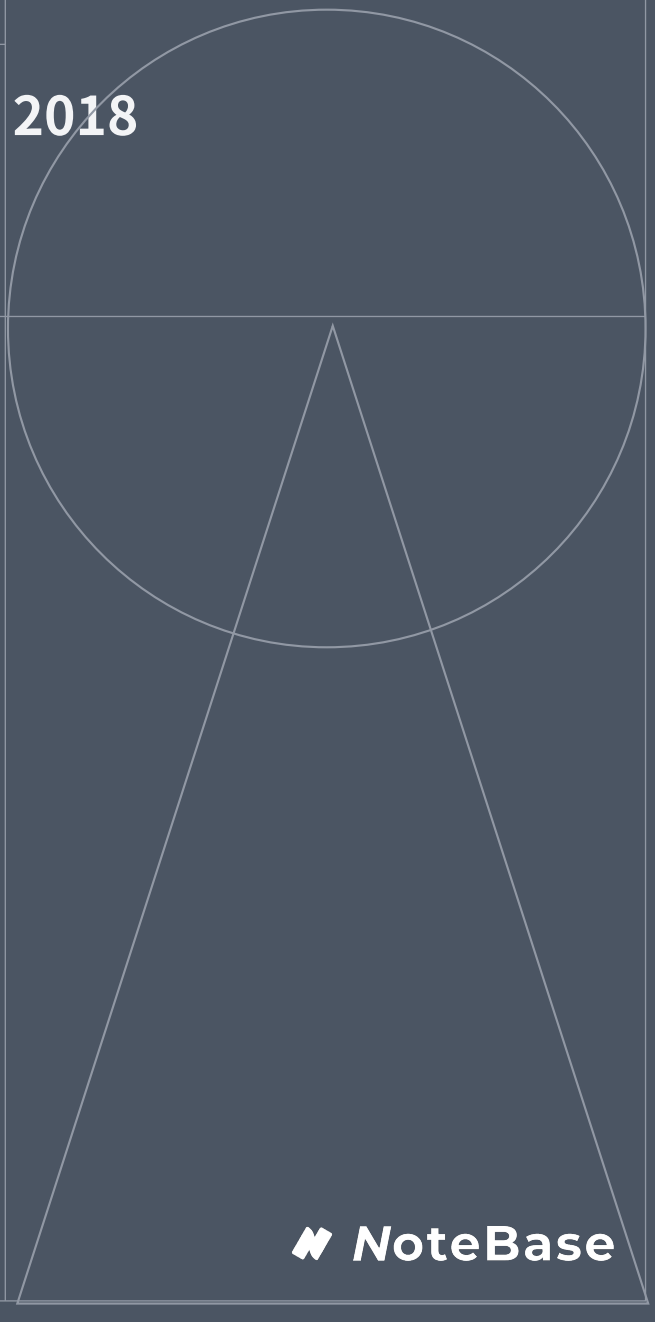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8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8

문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통령제적 특징**이다. 국회와 내각의 긴밀한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이끌며 행정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지위가 같지는 않다(헌법 제86조 제2항).

② O: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면 같은 사람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함께 참여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적 결합**이 나타난다. 이는 양자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다.

③ X: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 의결을 견제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특징**이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없다. 선지는 우리나라에 없는 권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권한의 성격을 구별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헌법상 요건에 따라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므로, 법률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막는 절대적 거부권은 아니다(헌법 제53조).

④ O: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 구성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과 달리, 해임건의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③ 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④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을인 홉스는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주권자에게 통치권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강력한 정치권력도 그 정당성의 출발점은 **구성원의 동의**에 있다.

선지별 해설

갑은 일반의지에 기초한 사회 계약을 주장한 루소이고, 을은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설명한 홉스이다.

① X: 루소의 일반의지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따라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설명은 일반의지의 의미와 어긋난다.

② X: 루소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며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인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가 지향한 정치 질서를 입헌군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민 주권과 직접 민주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③ X: 홉스에게 국가를 수립하는 목적은 자연상태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④ O: 홉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상태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계약하고 주권자에게 통치권을 부여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이처럼 **구성원의 동의와 계약**에 근거한다. 홉스가 강력한 주권을 옹호했다는 점과, 그 권력의 성립 근거를 구성원의 동의에서 찾았다는 점은 함께 성립한다.

NoteBase

문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 수 및 정당 득표율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명)	정당 득표율(%)
A	98	43
B	42	32
C	24	15
D	36	10

〈조건〉

◯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 1인 2표제를 통하여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다.

◯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득표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으며, 정당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다.

①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②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③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④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39%**로, 두 정당의 정당 득표율 합인 **42%보다 작다**. 지역구 의석 점유율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 200명을 기준으로 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국은 한 지역구에서 득표가 많은 순으로 2~4명을 선출하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도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O: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갑국의 중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③ O: 전체 의석은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을 합한 300석이므로, **과반수는 151석 이상**이다. 비례대표 100석을 표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A는 43석, B는 32석, C는 15석, D는 10석이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더하면 A는 98 + 43 = 141석, B는 42 + 32 = 74석, C는 24 + 15 = 39석, D는 36 + 10 = 46석이다.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A도 151석에 미치지 못한다.

④ X: 표의 '지역구 당선자 수'에서 B는 42명, D는 36명이므로 두 정당의 지역구 의석은 합계 78석이다.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분모는 **지역구 전체 의석 200석**이므로, 점유율 합은 $\frac{42+36}{200} \times 100 = 39\%$이다. 반면 표의 '정당 득표율'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 합은 32% + 10% = 42%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정당 득표율 합보다 **3%p 작다**.

NoteBase

문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제도를 바꾸었다.
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하였다.
ㄷ.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결정방식을 바꾸었다.
ㄹ.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다수대표제는 다수 세력에 의석이 집중되기 쉬워 **소수 세력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 권력분산에는 소수 세력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수대표제가 더 유리하다.

보기별 해설

권력분산은 의사결정 권한을 여러 기관이나 정부 수준에 나누어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ㄱ. O: 단원제는 하나의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지만, 양원제는 두 원이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 두 원이 **서로 견제**할 수 있어 하나의 의회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한다.

ㄴ. O: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지방정부가 인력과 재원의 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므로 **수직적 권력분산**에 해당한다.

ㄷ. X: 소수대표제는 소수 세력도 대표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다수대표제는 다수 세력의 대표 선출에 유리한 방식이다.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바꾸면 의석이 다수 세력에 집중되기 쉬워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분산에 유리한 변화는 **다수대표제에서 소수대표제로의 전환**이다.

ㄹ. O: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면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정책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부의 권력 집중을 완화한다.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ㄱ, ㄴ, ㄹ이며, 이는 ②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③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④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인구가 많을수록 유권자 한 사람의 표가 갖는 영향력이 작아진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은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과소대표를 완화**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뽑는 원칙이다. 제시된 결정은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른 표의 가치 차이를 문제 삼았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② X: 지역 대표성은 지역의 특성과 이익을 대표하는 측면이고, 인구 대표성은 인구 규모에 맞게 대표자를 배분하는 측면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비를 3대 1에서 2대 1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여,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대표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더 중시하였다.

③ O: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한 의원을 통해 대표된다. 따라서 최대 선거구 유권자 한 사람의 표는 최소 선거구 유권자의 표보다 영향력이 작아 **과소대표**된다. 인구편차를 줄이면 이러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④ X: 당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및 별표 1에 정해져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선거구구역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다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①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아파트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민법 제186조에 따라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을이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은 것은 등기를 진행할 준비가 된 것이며, 그 자체가 등기를 마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은 서류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A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O: 일반적인 매수인인 을에게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등기부를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법률상 열람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구별된다.

③ O: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당사자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준 사람이 이를 포기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지급 전의 이 단계에서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는 이 방식으로 해제할 수 없다.

④ O: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하면 그 효력은 본인에게 직접 생긴다. 따라서 갑과 을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에게 귀속된다.

NoteBase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기>
ㄱ.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ㄴ.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ㄷ.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갑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책임이다. 갑의 폭행으로 을에게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한 이 사례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ㄴ. X: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이다. 기소된 갑은 피고인이 되고, 을은 피해자이다. 을은 피해자라는 이유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된다.

ㄷ. O: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 갑은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을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ㄹ. O: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갑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를 모두 고른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④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결함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법정 면책사유와는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해당 제조물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된다. 사례에서 갑의 상해와 골동품 파손은 TV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TV의 결함으로 발생하였다면 이 법에 따른 배상 대상이 된다.

① O: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책사유로 정한다. 을이 사고를 일으킨 TV를 공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② O: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이는 을이 개인적으로 결함을 몰랐다는 사정이 아니라,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발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③ X: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결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순한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 법에서 정한 면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④ O: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급 당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단순히 법령상 기준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준을 따른 것이 결함의 발생 원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급 후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②와 ④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NoteBase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구속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 X: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도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이다.

○ X: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항고'가 아니라 **항소**이다. 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 부분은 맞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71조·제402조는 각각 항소·상고·항고의 대상을 규정한다.

○ X: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지휘하며,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하는 경우가 예외이다.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바꾸었다.

○ X: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이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 후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의 효과이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옳은 설명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제시한 첫 번째 설명 하나이므로, 개수는 1개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와 심사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후보자의 선출·지명과 최종 임명**은 구별된다.

② X: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최종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선지의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으로 고쳐야 한다. 이와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③ O: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소추 의결만으로 곧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된다.

④ O: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할 수 없다.

NoteBase

문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가)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은 유럽인들의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나) 태어난 직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던 일란성 쌍둥이가 키와 얼굴,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했지만,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① (가): 공유성, (나): 총체성
② (가): 총체성, (나): 학습성
③ (가): 축적성, (나): 공유성
④ (가): 학습성, (나): 총체성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목축업이 식생활·의복·주거·예술 등 여러 생활 영역에 영향을 준 것은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총체성**을 보여 준다. 유전적 조건이 비슷한 쌍둥이도 성장 환경에 따라 규범적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문화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학습성**을 보여 준다.

대응 관계 해설

(가): 총체성. 문화의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룬다.
목축업이라는 한 요소가 식생활뿐 아니라 의복·주거문화·예술활동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공유성은 같은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공통으로 지닌다는 뜻이고, 축적성은 이전 세대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전승된다는 뜻이므로, 이 사례에서 강조한 요소 간의 연관성과 구별된다.

(나): 학습성. 문화는 유전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가 키·얼굴이나 운동 및 인지능력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문화적 행동이 성장 과정의 학습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 준다. 이 사례는 같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공유성이나 여러 문화 요소의 연결을 강조하는 총체성보다 학습성을 드러낸다.

(가)는 총체성, (나)는 학습성으로 연결되므로 ②의 대응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는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는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①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②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④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뒤르켐은 종교 공동체의 결속과 의례가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개인의 선택을 설명할 때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선지별 해설

제시문은 사회가 개인을 넘어서는 독자적 특성을 지니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뒤르켐은 가톨릭 공동체의 강한 결속과 의례가 개인의 고립을 줄여 자살률을 낮춘다고 설명한다.

① X: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체로만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설명이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인 특성과 영향력**을 지닌다고 본다.

② X: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개인의 의지와 능동성을 강조한다. 사회 실재론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변화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사회 규범이나 제도의 구속력**으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③ X: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부합한다. 제시문의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제도와 공동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조한다.

④ O: 사회 실재론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능동성보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제시문에서 자살률의 차이를 개인의 의지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종교 공동체의 결속과 의례에서 찾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나)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기>
ㄱ.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ㄷ.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ㄹ.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
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① (가): ㄱ, ㄴ, (나): ㄷ, ㄹ, ㅁ
② (가): ㄱ, ㄴ, ㄷ, (나): ㄹ, ㅁ
③ (가): ㄴ, ㄷ, (나): ㄱ, ㄹ, ㅁ
④ (가): ㄴ, ㄷ, ㄹ, (나): ㄱ, ㅁ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목표와 이를 이룰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일탈을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이다.
(나)는 일탈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사회가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이룰 합법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택하는 일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 일탈적인 태도와 가치, 행동 방식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고 본다.

ㄱ. (나):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닮아 간다는 뜻이다. **일탈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동을 배운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과 연결된다.

ㄴ. (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목표만 이루면 수단은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성공 목표를 추구하면서 **합법적 수단을 따르지 않는** 일탈을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과 연결된다.

ㄷ. (가):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는 생계가 막막하면 도둑질과 같은 일탈에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문항에서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합법적 수단의 제약**이 일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아노미 이론과 연결된다.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일탈한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ㄹ. (나): '까마귀 노는 데 백로야 가지 마라'는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리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표현이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보다 **누구와 교류하는가**에 주목하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과 연결된다.

ㅁ. (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친구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속담 자체가 일탈만을 뜻하지는 않지만, 이 문항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과 연결된다.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표현은 ㄴ · ㄷ, (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ㄱ · ㄹ · ㅁ이며, 이 분류에 맞는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관점은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 사회에 비해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고 본다.

<보기>
ㄱ.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ㄷ.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
ㄹ.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시문은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의 관점이다.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발전 방향**이 있다고 보며, 서구 사회를 발전의 기준으로 삼아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진화론은 사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하고,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발전한다고 본다. 제시문의 '복잡성 증가'와 '적응 능력 향상'은 사회 변동을 진보로 이해하는 이 관점의 단서이다.

ㄱ. O: 진화론은 서구의 산업화된 사회를 발전된 사회의 모델로 삼고, 다른 사회도 그와 같은 경로로 발전한다고 본다. 각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서구 사회를 보편적인 발전 기준**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O: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ㄷ. X: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발전과 진보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가 쇠퇴하거나 퇴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퇴보의 가능성도 잘 설명한다'는 표현은 **퇴보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로 고쳐야 한다.

ㄹ. X: 사회 변동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관점은 **순환론**이다. 순환론은 사회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보는 반면, 진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①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국은 중층 비율이 1980년 30%에서 2010년 50%로 늘어 **중층이 가장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었다. 중층이 두터운 구조는 계층 간 대립을 완화하여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층이 상·중·하만 있으므로 중층 비율은 전체 100%에서 상층과 하층 비율을 빼서 구한다. 갑국의 중층 비율은 1980년 100 - 20 - 50 = 30%, 2010년 100 - 20 - 30 = 50%이다. 하층 비율은 50%에서 30%로 줄고 중층 비율은 30%에서 50%로 늘어, 피라미드형에서 **중층이 가장 두터운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였다. 중층이 두터우면 상층과 하층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여 계층 간 대립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② X: 을국의 2010년 중층 비율은 100 - 30 - 50 = 20%이다. 상층 30%, 중층 20%, 하층 50%이므로 중층이 상층과 하층보다 모두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피라미드형은 상층에서 중층,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커지는 구조인데, 을국은 중층 비율이 상층보다 작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계층 구조의 개방성은 개인이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기회와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는 각 시점의 계층별 비율만 보여 줄 뿐, 개인의 계층 이동이나 이동 기회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층별 비율만으로 갑국이 을국보다 폐쇄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④ X: 을국의 중층 비율은 1980년 50%에서 2010년 20%로 줄었고, 상층과 하층 비율은 각각 20%에서 30%, 30%에서 50%로 늘었다. 이는 중층이 축소되는 계층 양극화의 모습이다. 그러나 표에는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복지제도 확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층별 비율의 변화이다.

NoteBase

문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이다.
ㄴ.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산요소 가격상승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는 오르면서 생산은 감소할 수 있지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은 물가하락을 동반했다.

보기별 해설

ㄱ. X: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서는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했다. 따라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니라,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난 사례이다.

ㄴ. O: 생산요소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총공급이 감소한다. 이때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은 감소**하므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ㄷ. O: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불황 속에서도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옳은 보기는 ㄴ, ㄷ이며, 이는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구분	A국	B국
신발(1단위)	7명	6명
전화기(1단위)	9명	5명

<보기>

ㄱ.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ㄴ.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ㄷ.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우위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국은 두 재화 모두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적어 **모두 절대우위**에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 판단하므로, B국은 신발이 아니라 전화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절대우위는 같은 재화 1단위를 더 적은 노동량으로 생산하는 능력이고, 비교우위는 같은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기회비용은 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노동을 사용하여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ㄱ. O: 신발 1단위에 필요한 노동량은 A국 7명, B국 6명이고, 전화기 1단위는 A국 9명, B국 5명이다. 따라서 B국이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절대우위론은 각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무역의 이익을 설명한다. 이 자료에서는 **A국이 절대우위를 가진 재화가 없으므로** 절대우위론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설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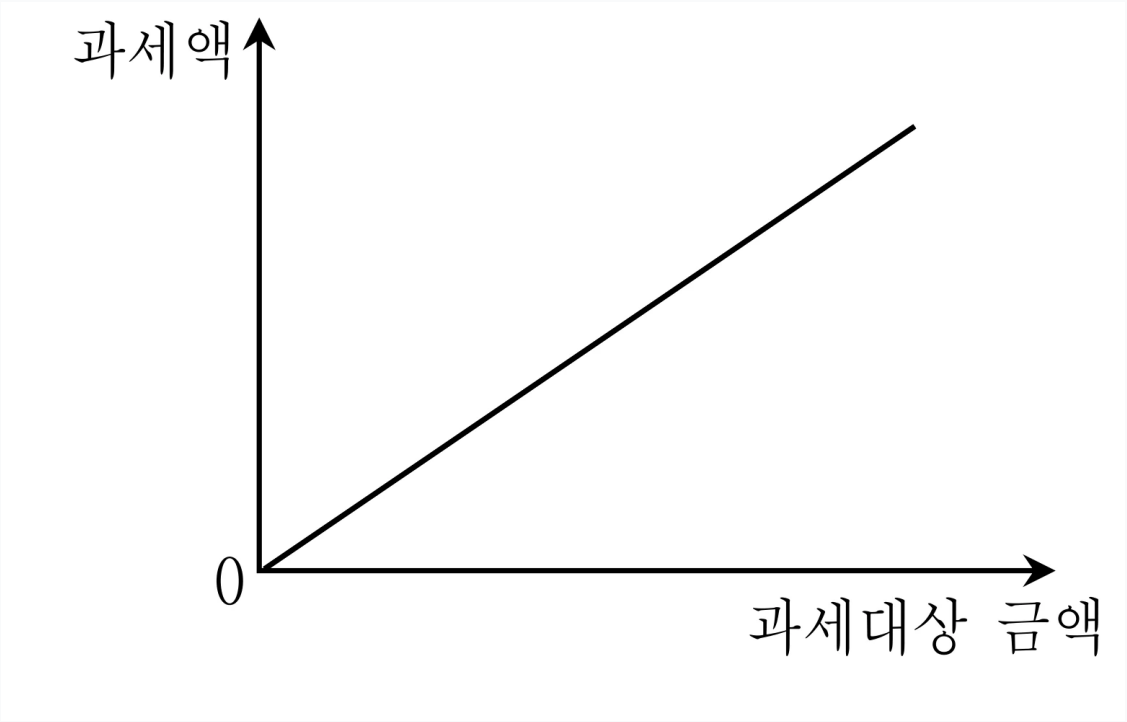
ㄴ. X: 신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B국이 더 적으므로 신발의 절대우위는 B국에 있다. 그러나 신발 1단위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화기의 양은 A국이 $\frac{7}{9}$단위, B국이 $\frac{6}{5}$단위이다. $\frac{7}{9} < \frac{6}{5}$이므로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더 낮다. 따라서 신발의 **비교우위는 A국**에 있다.

ㄷ. O: B국은 신발과 전화기 모두 A국보다 적은 노동량으로 생산하므로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전화기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신발 생산에 사용하면 A국은 $\frac{9}{7}$단위, B국은 $\frac{5}{6}$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frac{5}{6} < \frac{9}{7}$이므로 전화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더 낮다**. 따라서 B국은 전화기 생산에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모두 가진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② 누진세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④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로축은 과세대상 금액, 세로축은 과세액이며,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과세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과세액도 늘어나므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래프는 과세대상 금액과 과세액이 정비례함을 보여 준다. 과세대상 금액이 두 배가 되면 과세액도 두 배가 되므로, 과세대상 금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율은 일정하다**.

② X: 그림은 비례세 방식이다. 누진세는 과세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과세액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누진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누고, 높은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 방식**이다. 따라서 그림처럼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 방식과 다르다.

④ X: 비례세는 과세대상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없다. 저소득층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상대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누진세**이다.
비례세는 누진세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NoteBase

문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①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③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④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수요가 일정할 때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각 요인만 변한다고 할 때,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따라 새 균형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 비교한다.

① 대체재 가격 하락: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체재가 저렴해지면 소비자들이 그 상품으로 소비를 옮겨 **X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X재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

② 소득수준 향상: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이다. X재는 정상재이므로 소득이 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③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비가 증가하면 생산자는 같은 가격에서 이전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려 한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종전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새 균형에서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수입 증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X재가 늘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장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균형가격 상승과 균형거래량 감소를 동시에 일으키는 것은 공급 감소이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시한 ③이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A국: 생산가능인구(노동인구) 10,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일 때, 실업자가 (㉠)명이면 고용률은 (㉡)%이다.
B국: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가능인구가 (㉢)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가 된다.

① ㉠: 200, ㉡: 58, ㉢: 30,000, ㉣: 55

② ㉠: 300, ㉡: 57, ㉢: 25,000, ㉣: 60

③ ㉠: 300, ㉡: 63, ㉢: 25,000, ㉣: 60

④ ㉠: 200, ㉡: 62, ㉢: 30,000, ㉣: 55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B국의 경제활동인구는 15,000명이며, 생산가능인구가 25,000명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0%이다. A국에서는 경제활동인구 6,000명에서 실업자 300명을 뺀 5,700명이 취업자이므로 **고용률은 57%**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고,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이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A국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0 \cdot \frac{40}{100} = 4{,}000$명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는 10,000 − 4,000 = 6,000명이다.

㉠·㉡: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빼면 취업자를 구할 수 있다. 실업자가 200명이면 취업자는 5,800명이므로 고용률은 $\frac{5{,}800}{10{,}000} \cdot 100 = 58\%$이다. 실업자가 300명이면 취업자는 5,700명이므로 고용률은 $\frac{5{,}700}{10{,}000} \cdot 100 = 57\%$이다. 고용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이므로 ㉠·㉡의 조합은 200명·58% 또는 300명·57%여야 한다.

B국의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2%는 **경제활동인구의 2%가 실업자**라는 뜻이다. 실업자가 300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frac{300 \cdot 100}{2} = 15{,}000$명이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5,000명이면 $\frac{15{,}000}{25{,}000} \cdot 100 = 60\%$이다. 생산가능인구가 30,000명이면 $\frac{15{,}000}{30{,}000} \cdot 100 = 50\%$이므로 제시된 55%와 맞지 않는다.

㉠ 300명, ㉡ 57%, ㉢ 25,000명, ㉣ 60%가 두 나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